

종합·해설

■ 장관·장관급 명단 및 출신지 (7월 현재)

부처	성명	출신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대구
기획재정부	박재완	경남
외교통상부	김성환	서울
국방부	김관진	전북
지식경제부	최종경	경기
법무부	권재진(내정)	대구
행정안전부	맹형규	서울
국토해양부	권도엽	경북
통일부	현인택	제주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경기
보건복지부	진수희	대전
고용노동부	이채필	울산
환경부	유영숙	강원
여성가족부	백희영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충북
검사원	왕건	경북
국가정보원	원세훈	경북
대통령실	임태희	경기
국무총리실	임채만	서울
특임장관실	이재오	경북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충남
금융위원회	김석동	부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전남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부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경북

■ 차관·차관급 명단 및 출신지

부처	성명	출신
외교통상부	박석환	경남
	민동석	전남
지식경제부	윤상직	대구
	김정민	부산
통일부	엄종식	서울
행정안전부	김남석	강원
	이종배	충북
환경부	윤종수	충북
특임	김해진	경남
고용노동부	이기원	전남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경남
	김창경	서울
국방부	이웅걸	부산
	한민희	충남
국토해양부	김희국	경북
기획재정부	임종룡	전남
	류성길	경북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경북
	오정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서울
	박선규	전북
법무부	황태철	광주
보건복지부	최원영	경남
여성가족부	김태석	경남
검찰청	한상대(내정)	서울
소방방재청	이기환	대구
경찰청	조현오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경기
국세청	이현동	경북
기상청	조석준	충남
조달청	최규연	경원
통계청	우기종	전남
특허청	이수원	경원
해양경찰청	모강인	전남
농촌진흥청	민승규	서울
중소기업청	김동선	경원
관세청	주영선	전북
문화재청	최광식	서울
방위사업청	노대래	충남
국가보훈처	박승준	광주
법제처	정선태	광주
법무청	김영후	전남
행정중심도시건설청	최민호	대전
산림청	이돈구	충북

■ MB정부 4년차 광주·전남 장차관급 인맥 해부

권력 요직엔 한명 없고 대부분 변방 포진

청와대 고위직 인사 63명 중 지역 출신은 박재영 행정자치부 차관 1명뿐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주·전남지역 출신 장·차관 비율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관 및 장관급은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차관 및 차관급은 8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시 현상?=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차관 및 차관급이 8명이나 된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관료들이 '차관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만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차관 및 차관급은 대부분 업무 실적을 토대로 한 내부 평판을 토대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배려 등 정부적 판단이 비교적 적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차관 및 차관급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관료들이 많이 기용된 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호평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 및 차관급 인사들의 출신 지역 비율을 놓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배려를 통한 국민화합의 의지를 읽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차관 및 차관급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흡 있는 부처보다는 변방의 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각 부처의 호남 인맥들이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주장이다.

과거 농림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을 역임한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출신 차관 및 차관급이 많다고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을 다시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각료와 청와대, 권력기관 인사에서 나타나는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철학 부재와 오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Choi@kwangju.co.kr



25일 광산구 수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회'에 참석한 주민이 강 운태 시장에게 원안대로 U대회 수영장을 수원지구에 건립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姜, 수영장 입지 원칙론 고수

어제 '수원주민과의 대화'

과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정 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이준형씨는 "전임 시장이 잘 못했다는데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원안대로 건립하라고 주장하는 주민들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시민끼리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수원지구를 U 대회 수영장 부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그 어디에서도 밝힌 적이 없다"

며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과의 대회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넘게 진행됐으며, 질의에 나선 한 주민이 아이들 교육 문제를 들며 도서관 건립 등을 이야기하자 다른 주민들이 "수영장 이야기부터", "시청에서 심은 사람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수현기자 yang@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10만명 입주 대상

영구임대 1만4000세대 불과

■ 광주 집 없는 서민 살 곳이 없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5일 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가 약 7000명에 달하고 있고, 국민주택 이상 규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600만~700만 원을 호가하는 등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재생사업이 시정의 최대 현안인데다 구도심 내 거주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한 강 시장이 그 해법을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공공영구임대아파트 공급'에서 찾은 것이다. 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상당수가 중단상태에 있으며 중앙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대상구역에 500세대가 들어선다면 100세대 정도를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도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사업 주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정책

및 재원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7만명, 영구임대 1만 4000세대 불과=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을 국민임대는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 매달소득의 50~7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두 저소득층이지만 영구임대와 비교해 높은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받는 국민임대는 최근까지 공급되고 있으나 영구임대의 경우 수요비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6만5476명, 장애인은 6만 8518명, 한부모 가정은 4430세대(1만1509명) 등으로, 영구임대 입주대상자는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는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3500세대에 대해 국비 1억 6000만원 등 15억1400만원을 들여 노후 공용시설 및 세대 내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주거실태 및 요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 대기자

면적	37.73㎡ (12평)	48.67㎡ (14평)	62.58㎡ (17평)
상촌 시영	278	319	269
하남 시영	127	116	181
금호 시영	144	463	919
계	2816명		

■ LH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면적	39㎡ (11.80평)	43㎡ (13평)	56㎡ (16.94평)
두암4 주공	269	631	-
두암2 주공	82	325	-
우산 주공	229	379	-
오치 주공	114	331	-
각화 주공	58	86	-
생촌 주공	231	340	447
하남 주공	75	233	318
계	4148명		

1274세대, 오치주공 1658세대, 하남 주공 1884세대, 쌍촌주공 1416세대 등 1만420세대로 모두 합쳐져 1만 3920세대에 불과하다. 새로운 영구임대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하반기 시영 영구임대주택 3500세대에 대해 국비 1억 6000만원 등 15억1400만원을 들여 노후 공용시설 및 세대 내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주거실태 및 요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 만평

- 김종우



육·해·공 어찌하오리까? !

왕복항공으로 떠나는

제주도 바캉스 상품 특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인증한 우수여행상품

왕복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와~ 여름방학이다! 가깝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떠나가볼까요!

관광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는 바캉스 - 최고의 일석이조 여행

가족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롭고 알찬 일정